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비판... “문화전당 특별법 통과” 한목소리

당권후보 3명 호남현안 입장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들이 정부의 호남 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검토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는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당력을 총동원,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일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들은 광주일보의 호남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우선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 논란에 대해 박지원 후보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호남 고속철의 개통을 앞두고 갑자기 노선과 설계를 바꾼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호남 고속철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이 맞게 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개통을 눈앞에 두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 대표가 되면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 및 지역 대표들과 함께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는 호남 고속철이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호남 민심과 충청 민심을 간절히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서대전역 경유 문제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 철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문법 개정안과 관련, 세 명의 당권 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구를 4월 보선 공천 방식

국민경선·시민심사단 제안

박지원 의원은 ‘아문법 개정안 통과’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후보는 ‘아문법 개정안은 협상의 대상도 아니며 개정안 원안 통과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을 등 4월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는 “당원 추천형 국민경선제”를 제시했다. 중앙당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만 하고 지역 당원과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해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후보는 시민공천심사단안을 구성,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천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당 혁신위의 내년 총선 공천에서의 국회의원 평가제와 관련, 박 후보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엄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속 정당 평가는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정치 신인의 진입을 쉽고, 다선은 엄격하게 하는 시스템 공천이 정당 혁명의 기본 골격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마지막 후보 합동연설회가 1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 대표 후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이인영·박지원 후보(기호순) /연합뉴스

대의원 현장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30% 반영

새정치 지도부 선출 방법·절차

당원·국민 여론조사 25%

내일부터 권리당원 투표

새정치연합 2·8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현장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30%, 일반 당원 여론조사 10%, 국민여론조사 15%’의 지지를 합산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대의원 1만5000여명은 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열리는 전당대회 현장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당 안팎에서는 전체 대의원의 70% 정도가 현장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후보 측에서는 지지 성향 대의원들의 전대 현장 동원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권리당원 ARS 투표는 3일부터 6일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우선 3~4일에는 중앙당 콜센터에서 권

■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투표 일정

일시	투표방법
2월 3~4일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 투표
2월 4~6일	재외국민대의원 이메일 투표
2월 5~6일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 투표, 여론조사(국민여론조사·당원여론조사)
2월 8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의원 현장투표)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오후 1시

리당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가며 이를 통해 투표를 실시한다. 이를 강제적(Out-bound) 권리당원 ARS투표라고 한다.

5~6일에는 중앙당 콜센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당원의 핸드폰에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다.

투표를 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이 이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투표를 하면 된다. 이를 자발적(In-bound) 권리당원 ARS투표라고 한다. 전화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권리당원은 26만여명이며 호남 권리당원의 규모는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권리당원이

■ 2·8 전당대회 투표결과 합산 방법

대상	비율(%)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30
여론조사	당원 10 국민 15

ARS 투표에 얼마나 참여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는 5~6일 이를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 여론조사 대상은 새정치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운명의 일주일’... 당권·최고위원 후보들 막판 세몰이

서울·경기 합동연설회 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권 판세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고위원 판세도 안개 국면이어서 각 계파는 물론 성향, 친소 관계 등에 따른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등 막바지 ‘진영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3일부터 6일까지 이뤄지는 권리당원 ARS 투표에서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 권리당원의 지지와 부동산이 상당한 수도권 당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 진영의 백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31일 서울과 인천 합동연설회에 이어 1일에는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격돌했다.

박지원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당권·대권 분리론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의 바람은 정권교체 단 하나 뿐”이라며 “저의 남은 인생을 정권교체에 바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정권교체가 끝나면 홀연히 사라지겠다”며 비장한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는 바로 문재인”이라며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당 혁신과 총선 승리에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영 후보는 ‘정권 심판론’과 ‘세대교체론’을 함께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북 지도 없는 중세”만을 일삼는 딱튀 정권을 심판하고, 저들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지도부 주자들의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일정은 마무리 됐다.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는 8일까지 취약 지역 등을 공략하며 세 걸잡에 막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당권주자들은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호남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판세가 접전으로 흐르면서 ‘링 부’에서의 난타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박 후보와 문 후보 진영에서는 일부 구청장이나 현역 의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돌린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또 양측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를 최종 득표율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 측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후보의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지지후보 없음’ 응답은 계산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www.dad.go.kr

성숙한 지방자치로 주민행복이 더 커집니다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청사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년 12월 2일,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제대로 추진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색깔있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강력한 지방분권 기초 확립과 실현 | 02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 03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 04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